

동향보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
2016. 12. 5주 제64호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정책 동향보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

 Jthink 전북연구원



Contents

I. 정부 추진동향

1.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3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5
3.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6
4. 주택시장 과열·위축지역 맞춤형 대응한다7
5. 2017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오픈랩 구축 추진9

II. 수도권 추진동향

1. 지역 균형 발전책 ‘헛심... 경제 수도권 편중 되레 심화10
2. 도서 지역 수도권 규제, 폐지해야11
3.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발전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12
4. 국내 유턴 기업 세제혜택·수도권도 규제 풀린다13

III.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채용” ... 의무화 조속 처리 목소리14
2. 세명대 수도권 분교 설립 절대 불가15
3. 경북,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16
4. 정치문학분야에서마저 지역이 소외 돼서야18

I. 정부 추진 동향

1.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 투자계획 확정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1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산업통상자원부

02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1(수)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세부사업 약 9,174억원 : 국비 6,423억원, 지방비 2,751억원
-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4차산업혁명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5대 신산업-수출활성화 연계 육성, 조선밀집지역 보완먹거리 발굴·육성이 특징임

<표 1>
세부사업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구분	국비	지방비	소계	비고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78	849	2,927	시도별 5개 이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875	766	2,641	시도간 3개 이내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78	20	98	이전공공기관
시군구 지역연고전통사업	405	44	449	행복생활권 포함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987	1,072	3,059	인프라조성 포함
합 계	6,423	2,751	9,174	

1) 시도 주력산업육성사업

- 시·도 단위 육성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중추산업(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원

<표 2>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조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조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2) 시도 주력산업육성사업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지역기업이나 주민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고(전통)산업품목
-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R&D까지 전주

기적 패키지 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지역혁신센터조성(RIC)

- 지역(시군구)연고자원의 산업화(지역연고산업육성(RIS)), 대학 특성화분야 장비활용(지역혁신센터조성(RIC))
- R&D와 비R&D(마케팅,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3)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표3>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17개 협력권, 시도별 39개 협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명	참여시·도		경제협력권산업명	참여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I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 II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부품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4)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표3>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안)

분야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기술개발	• 공공기관-기업 공동R&D, •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 창조기술 이전-실용화 R&D
기반구축	• 지역공동활용(Open Lab)을 전제로 공공기관 연구장비 구매지원, 보유장비 개량, 장비도입 기획
인력양성	•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기업지원	• 공공구매(MRO) 활성화, • 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 공공기관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기반 클러스터 형성 지원

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별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두 분야로 지원

- 기반조성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공간에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 테스트베드로 활용
- 기술개발 :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

시사점

● 2017년 지역산업 육성예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

출처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

1. 정부 추진 동향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6.12.2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산업통상자원부

02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 결과 국비 156억원 지원**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

● **2016년 보조금 총 1,250억원 지원**

- 1조 3,288억원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개 일자리를 창출

<표1>

2016년 유형 지원 내용

유형	기업수	지원금액	유형	기업수	지원금액
지방이전	11	166억원	신증설투자	53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	40억원	스마트공장	186	60억원
개성공단기업	10	117억원	국내복귀	1	16억원

- 지방이전, 신증설 : '04년~'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 조선업 경기 어려움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
- 개성공단 기업 : 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스마트공장 :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
-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지방비 65:35 비율로 지원

시사점

-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활용하여 지방투자촉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출처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

1. 정부 추진 동향

3.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8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행정자치부

02 주요 내용

-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 부가세 면제로 기관당 연 평균 약 9.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되어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함
 -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가가치가 면제되어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
-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10년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되었던 기초 지방공사 8곳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되어 면제될 예정
 - 기초지방공사 : 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의왕, 안산 도시 공사

<표1>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사 현황 (28개소)

시도	수	기관명
경기	14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남양주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강원	3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충남	1	당진항만관광공사
전북	1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	1	여수도시공사
경북	3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남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 개발공사

시사점

- 기초 지방공사의 경영개선 효과와 함께 향후 주민서비스 개선과 함께 관광 및 농산품 등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 유연성 확보 기대

출처

-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8

1. 정부 추진 동향

4. 주택시장 과열 · 위축지역 맞춤형 대응한다

01 개요

보고 형식	보고 자료	보고 일자	2016.12.29
보고 대상	전국	보고 매체	정책브리핑

02 주요 내용

-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
-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
 -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 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 ·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

1) 부문별 활력제고

-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 실제 투자로 유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85조원 공급 등 세제 · 금융 집중 지원
 -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으로 확대
 - 중소 · 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500억원으로 확대
 - 친환경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인센티브를 부여
- 소비심리 조기 회복 및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 강화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및 취득세 50%(승합 · 화물차)를 한시 감면
 -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전통시장 및 공연 · 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
 -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 수립(3월)으로 국내관광기반을 확충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해외진출 촉진
 -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8조원 확대
 - 기초 원자재와 신산업설비 · 원재료에 대한 활당관세 적용 확대
 -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재교역 확대 검토, G20 · APEC 등 국제공조를 강화
 -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 2조2000억원 확대

2) 리스크 관리 강화

- 대외부문 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
 - 외화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1월)

- 외환건전성부담금 · 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영,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IR 강화

●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 신속 추진**

-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조정
- 사잇돌 중금리대출 1조원 확대, 금융회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 탄력적 대응**

-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
- 청약시장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수급불균형 개선
-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5만호까지 확대
-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나 매입임대리스 설립 등을 통해 시장안정장치 확보, 전세보증반환보증을 활성화



시사점

● 정부 주도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현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방안 마련

출처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26868&call_from=media_daum

1. 정부 추진 동향

5. 2017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오픈랩 구축 추진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9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산업통상자원부

02 주요 내용

- 「2017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 2017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16.12.28일자로 공고
 -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대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
 - 오픈랩(기반구축사업) 유형을 신설
 - 지역 공동활용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장비를 지원하는 오픈랩(Open Lab)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기업지원서비스를 활성화
 - 과제기획의 자율성도 부여
 - 기존 사업유형(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은 유지하되,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10억 이내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자유롭게 구성·지원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융합얼라이언스 체제로 개편
 - 12개 지역 테크노파크(TP)에서 수행하던 네트워크 지원역할에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TP 등)을 포함
- 지원 대상**
-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지역혁신역량,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협력 강화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
 - 해당 사·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지원유형**
- 패키지과제 :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총괄주관)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
 - 네트워크 과제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패키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지원
 -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연계사업의 수행과제 모니터링·연계 촉진, 지역협력사업의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 가교,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 시사점**
- 각 지역의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 확대의 영향과 함께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분석 진행 필요

출처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

II. 수도권 추진동향

1. 지역 균형 발전책 ‘헛심.... 경제 수도권 편중 되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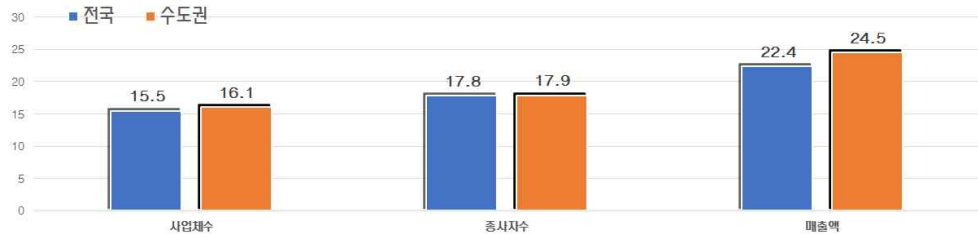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6.12.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민일보

02 주요 내용

- **국내 경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
 - 5년간 사업체와 종사자수, 매출액 증가율 모두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헛심**
 - 정부가 세종시에 부처를 이전하고, 지방에 공공기관을 내려보냄
-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
 - 사업체수 : 2010년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16.1% 증가, 전국 15.5%
 - 사업체 종사자수 : 수도권 17.9%, 전국 17.8%
 - 사업체 매출액 : 수도권 24.5%, 전국 평균 22.4%

< 그림 1 >
전국·수도권 경제총조사
지표 증가율



- **국내 경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절반을 넘어섬**
 - 수도권 소재 사업체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47.4%
 - 종사자수는 전체의 51.4%, 전체 매출액의 55.1%
- **수도권 내의 변화 : 사업체수가 경기도가 서울보다 근소하게 많음**
 - 시·도별 사업체수 : 경기도 82만8000개, 서울 82만1000개
- **수도권 편중 현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수도권 내에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사점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4040&code=11151100&cp=nv>

II. 수도권 추진동향

2. 도서 지역 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01 개요

보고형식	사설	보고일자	2016.12.22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조선일보

02 주요 내용

- **접경이나 도서 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더라도 별도의 기준이 필요**
 -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
- **강화군과 용진군은 농·어업이 주산업인 지역이나 수도권의 다른 성장관리지역과 매한가지로 규제 대상임**
 - 투자 기업 유치에 재정 지원도 없으며 개발부담금도 부과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도 다른 지방보다 적음
 - 생산 시설이나 대학교 등도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제한
- **인천에는 투자와 산업 활성화의 전장(戰場)인 청라·송도·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나 수도권 규제가 미치는 영향으로 베드타운 기능이 현저함**
 - 생산 시설 유치를 방해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
 - 인천도 인구 300만명을 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시로서 이제 내실 강화가 시급
-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20년**
 - 자기 역량 강화가 바탕
 - 충청은 행정수도권, 경남 해양수도권, 강원은 관광수도권
 -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도시·기업도시 같은 지역 거점 부흥 정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획일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지원**
 - 일본의 '고향 납세' :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냄으로써 수도권 세금을 지방으로 돌리는 제도
 - 지역 정부에서 보내오는 농수산물 답례품을 소비한다든지 시민 주주로서 초대받아 그 지방 활성화에도 일조
 - 인구 17만명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주인 미야코노조(都城)시에는 작년엔 400억원이 넘는 기부금
-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지역균형발전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논리 지속 개발 필요**
-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12&D=22&ID=2016122200085

시사점

출처

II. 수도권 추진동향

3.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발전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제외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3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02 주요 내용

- 12월21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대 온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82년 제정
- 접경지역은 획일적인 규제로 역차별을 받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4488, 2016년 12월 20일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
- 이미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시사점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안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출처

-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74485

II. 수도권 추진동향

4. 국내 유턴 기업 세제혜택...수도권도 규제 풀린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성남 등 주택 거래 제한 완화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30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기호일보

02

주요 내용

- 경기도로 복귀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제 지원이 이루어짐
- 경기도내 청약 조정 대상지로 묶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지역의 주택 거래 제약이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
 -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확대 정책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
- 기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에 대한 비판
 - 교통 여건이나 소비시장과의 거리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제약
-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 적용
- 분양 과열, 시장 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경우에 따라 거래 제한 조치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
 - 과천·성남(공공택지 및 민간택시아파트)·하남·고양·남양주·화성(공공택지)
 -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련내용

유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

- 현행 : 비수도권 복귀에 한정, 부분복귀시에는 중소기업 한정
- 변경 : 수도권 중 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 포함, 부분복귀시 중견기업 포함

시사점

- 기업의 투자제약 사항은 비단 유턴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에 있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
- 추가 인센티브 등 유턴기업 비수도권 유치 전략 마련 및 향후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정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8937>

III.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채용” … 의무화 조속 처리 목소리

현행법령 권고사항 그쳐 한계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1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국제신문

02 주요 내용

-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 토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이창희 진주시장) 도시인 경남 진주시는 21일 보도자료
 - 현재의 지역 인재 채용 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인력 확대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실제 신규직원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에 그침
-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지역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신속히 처리 요청
- 정규직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의무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인력 채용의 지역 편중성 문제와 평등권 위반과 같은 위헌적 요소와 실효성 등으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고려
 -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역과의 소통 등 지역 정착에 기여
 - 특히 법안 통과와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시사점

-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의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함께 향후 지역 일자리창출에 있어 지역 인재의 교육 및 채용 등과의 연계 강화 필요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2.2201019213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2. 세명대 수도권 분교 설립 절대 불가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6.12.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청일보

02 주요 내용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도종환의원 등 29명에 의해 공동 발의
- **세명대 수도권 분교 설립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
 - 2016년 12월 21일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반대 제천시민추진위원회 간담회가 개최
- 시민의 희생으로 설립된 대학의 운영에 따라 발생된 적립금을 타 지역에 투자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온당치 않음
-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학부모들에게 홍보 를 통해 세명대대원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의견
- 대학도시로 성장과 대학 발전을 위해 지원할 부분을 찾아 협력
- 세명대의 수도권 분교 설립 저지는 시민 모두의 합의사항
-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켜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제천시는 세명대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3명을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장학금 7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745, 2016년 7월7일 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 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 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를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시사점

- 비수도권 대학 추가 수도권 이전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출처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457>

III.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3. 경북,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향후 10년간 청사진 마련... '시·군별 단편적 개발 사업' 극복

01 개요

보고형식	보고자료	보고일자	2016.12.28
보고대상	전국	보고매체	국토교통부

02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17~2026)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
- '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자원 조달방안 등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 경상북도 내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
 - 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 하에 6개 추진전략
 - 연계협력형 관광자원 고부가가치화, 2)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3) 지역활성화 인프라 확충, 4) 지역정체성 확립, 5) 관광·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거점간 인프라 개선, 6)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표1>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추진전략	대표사업	사업내용
연계협력형 관광자원 고부가가치화	주왕산 국립공원 자연경관 및 탐방로 정비사업	- 주왕산 탐방객이 산(청송군)과 바다(영덕군)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과 다목적마당 등을 조성 - 주왕의 전설을 토대로 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캠핑장을 활용한 숙박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 등을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영양 전통시장-산촌문화누림터 간 연계도로 사업	- 98년 전통 5일장인 영양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를 정비 - '영양군청-재래시장-산촌문화누림터-삼지연꽃테마파크-영양고추유통센터' 로 이어지는 도심전통시장관광벨트의 복합기능을 강화
지역활성화 인프라 확충	닭실마을 명승(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	- 명승지인 닭실마을의 진입도로가 급커브와 시계불량으로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선형 등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 110개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5조 5,908억원을 확정
-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제척하여 65개 사업을 반영
 - 신규 사업은 전략과의 부합성, 파급효과, 국비지원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45개 사업(국비 지원 규모(안)는 2,159억 원)을 반영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 충청북도 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간 균형발전'라는 비전 하에 4개 추진전략
 - 1)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2) 지역간 연계인프라 확충, 3)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4)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표2〉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추진전략	대표사업	사업내용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묘목의 70%를 생산하는 옥천군에 대규모 묘목유통단지를 조성 - 방문하는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이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 산업·농공단지 종사자 등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낙후된 정주환경과 휴식공간을 개선 - 미니복합타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공원과 테마다리(인도교)가 조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속리산 복합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복합 휴양·관광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주차장을 개설

- 43개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2조 658억원을 확정
- 기존 추진 사업
 - 20개 사업을 반영
 - 신규 사업은 23개 사업(국비지원 규모(안)는 732억 원)을 반영

시사점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논리를 강화하고 각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확대 필요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cate=1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4. 정치문학분야에서마저 지역이 소외 돼서야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6.12.2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 내용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소외론이 대표적이며, 최근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한 소외론이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학진흥 태스크포스(TF)가 문학관 건립 적정 후보지로 서울지역 3곳을 언급
- 전국 지자체들이 즉각 반발
 - 문체부가 산하 TF를 통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지자체가 24곳의 국립한국문학관 후보지를 신청
- 충북도 지난 5월 청주와 옥천의 2곳을 최종 후보지로 신청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흥덕구청 옆 공공용지(시유지), 옥천군 정지용문학공원 일원
-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서울지역 후보지의 일방적 추가는 횡포라고 판단되며 지방소외론을 확산시키는 요인
- 국립한국문학관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설계·실행
 - 지리적·문화적·역사적인 특성을 고려해 최적지를 모색
- 문학마저 수도권으로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활성화 전략이 선행
- 국민 80% 가까이가 지방소외론에 공감
 - 중앙에 집중된 기형적 재원과 권한의 불균형으로 지역에서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음
- 지방소외론은 국론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
- 헌법에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운영 대원칙을 세워서라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분산시킬 필요

시사점

-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다수의 분야에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 활용가능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우선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출처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168>